

민주연구원 “모두를 위한 정년연장”의 쟁점과 과제’ 정책브리핑 발간

-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(원장 직무대행 송창욱 부원장)은 12월 15일(월), “모두를 위한 정년연장”의 쟁점과 과제”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.
 - 송창욱 부원장(원장 직무대행)은 “정년연장은 고령화와 정년-연금수급연령 불일치 등으로 노인 빈곤율이 높은 한국에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연의 문제”라며, “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, 노동시장 및 소득보장제도 개혁으로 노인 빈곤과 미래세대의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다”라고 밝혔다. 이어 “이번 정책브리핑은 정부 및 국회 정년연장특위의 활동을 정리하고 관련한 쟁점을 정리,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”라고 설명했다.
- 이번 정책브리핑은 국회 정년연장특위의 세 가지 안을 단기연장, 혼합연장, 장기연장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쟁점, 해외 사례를 검토해 정년연장 과제의 나아갈 방향을 다루었다.
 - 첫째, 정년연장이 청년고용 감소에 미칠 영향은 국제적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근거가 취약하다. 다만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고 급진적 연장시 고용이 잠식될 수 있어 단계적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, 노동시장 격차 완화, 종합적 고령사회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.
 - 둘째, 퇴직 후 재고용은 정년연장 기간 동안 부분적 병행이 필요하지만 지속될 경우 고용불안과 노동시장 양극화 가능성이 높아 제도 개선 및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다.
 - 셋째, 해외 주요 국가는 정년연장에 그치지 않고 고령자가 원하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점진적 은퇴를 지원하며 재교육·직무전환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.
- 민주연구원 신영민 연구위원은 “정년연장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, 해외 사례 및 과거 우리의 정년 의무화 조치의 효과를 검토하면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정년을 높이며 사회 전반의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”이라고 덧붙였다.